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밀과 범죄 사실의 추궁 문제가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며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머리를 흔
드는 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회의 진행중에 범죄사실과 상관없
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루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에만 일시 비공개 진행하
면 될 일입니다.

더구나 국정조사의 핵심사항들은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
위의 사실관계를 묻겠다는 것으로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모든 국민들이 특위 활동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특위의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4.